

# 식영정 수백년 지킨 소나무 죽게 놔둘건가

폭우에 뿌리뽑힌 채 고사 위기 문화재청, 담양군에 떠맡기고 담양군 제거 결정에 주민 분노 경사로의 위태로운 천년송도 받침목조차 설치 않고 방치



6일 담양군 남면 자곡리에 있는 식영정(명승 제57호)을 200여년간 지켜온 적송이 지난달 27일 폭우로 쓰러져 뿌리가 노출된 채 방치돼있다. /담양=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조선시대 전제사인 송강 정철이 '성산별곡'을 지은 곳으로 유명한 명승 제57호 식영정(息影亭·담양군 남면 자곡리) 곁을 수백년 동안 지켜온 적송(赤松)이 문화재청의 무관심과 담양군의 관리소홀 등으로 고사하고 있다. 최근 하루 동안 13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수령 2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적송이 쓰러져 뿌리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식영정에는 수령 100년 이상 된 소나무 50여 그루 등 모두 600여 그루의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적송 한 그루가 지난달 27일 쓰러졌다. 이 나무는 식영정(면적 2만 2000㎡)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며, 높이 10m, 무게 26t에 달하는 거목이다.

이 소나무는 지난달 28일 오전 식영정을 주변을 순찰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소나무가 쓰러진 장소는 경사면 45도에 달하며, 도로에서 50m 가까이 떨어진 곳이다.

담양군은 이를 문화재청에 알렸지만, 문화재청은 식영정의 수목은 군이 판단해 결정하라고 답변했다. 식영정은 문화재청 관리대상이지만, 주변 수목 등은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담양군은 이후 적송을 살리라며 5000원 짜리 수액 2병을 맞힌 게 전부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흠뻑으로 드러난 뿌리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강

한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말라가고 있었다. 한 주민은 "마치 적송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담양군은 소나무 회생 조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과 달리 지난 5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적송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군이 내세운 적송 제거 명분은 지난달 31일 나온 자문의견서다. 이에 따르면 식영정의 경사가 심해 작업 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고, 식영정의 건물과 인접한 석축과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는데다 나무를 세운다해도 생존할 가능성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작업을 해야할 포크레인의 현장 진입이 어려운 점과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영정 주변의 소나무를 최소 10그루 이상 제거해야 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담양군이 소나무를 살리는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50년 넘게 조경업을 해왔다는 한 전문가는 "흙 밖으로 드러난 뿌리 부분에서 수분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보온재로 덮고 나무 잔여이 빠지기 전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곧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담양 주민들은 "이번에 쓰러진 적송이 워낙 좋은 나무이다보니 고사 후 나무를 노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각에선 적송으로 바닥판을 만들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곳에서 수령이 가장 오래된 소나무로 알려진 '천년송'도 석축(石築)으로 쌓은 옹벽) 옆 경사로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

는 상황이다. 담양군은 미관 등을 이유로 천년송에 그 흔한 받침목조차도 설치해 주지 않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올해 4000여만원을 들인 수목보호 사업을 통해 병해충 제거를 위해 방역을 진행하는 등 나무 관리에 힘써왔다"면서 "쓰러진 나무는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지반 침하로 발생한 자연재해다. 천년송의 경우 너무 커 받침목과 나무를 지탱해줄 끈 등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광주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담양군은 적송 제거 결정을 번복했다. 쓰러진 나무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내년 1월까지로 보고 이 기간 동안 나무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4년간 민원 제기하고 공무원 고소한 악질 민원인 등

### 광주지검, 무고·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1명 구속·47명 불구속 기소

#1.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4년간 타인 소유 임야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남의 한 군청에 찾아가 30회 이상 민원을 제기했다.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담당 공무원은 수차례 해당 임야를 방문한 뒤 측량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차례 측량에도 해당 땅이 타인 소유로 밝혀지자, 군수와 담당 공무원, 측량에 참여한 지적공사 직원 등 10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7차례에 걸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무고 사건을

인지한 뒤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시달려온 군청직원들은 사건 담당인 황선욱 검사에게 편지를 보내 "이제는 담당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다.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2. 유부녀인 B씨는 내연남과 성관계를 했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내연남을 허위고소까지 했다. 내연남은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서게 됐다.

검찰은 최근 개정된 '성범죄 사건은 수사자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무고 수사를 중단한다'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켜본 뒤 B씨의 허위고소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남에 따라 무고사범으로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8월 집중 단속을 해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3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8명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무고 유형을 세분화해 사안별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익추구형'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전가형'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성범죄 무고형' ▲개인적인 감정, 보복 목적의 '보

복형 무고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위증유형으로는 ▲피고인 등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위증 교사 ▲가족, 지인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 ▲피해자가 피해 진술 후 심경변화 등으로 피해를 축소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지속·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무고·위증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악의적인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위증은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면서 "무고·위증 범죄로 국가의 수사력도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고·위증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종합자산관리회사 광주 본사 압수수색 검찰, 비상장 주식 관련 위법 혐의 포착

검찰이 광주에 본사를 둔 종합자산관리회사인 P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은 6일 오후 광주시 서구에 있는 P사의 본사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비상장 주식거래와 관련한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P사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창원, 울산, 전주, 순천 등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주식거래, 대체투자, 크라우드펀딩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종합

자산관리 회사다. 검찰은 비상장 주식 관련 위법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P사 회장은 광주·전남을 거점으로 한 신생 항공사를 비롯해 다수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주한 미대사 방문에 전남대생들 항의 농성

5·18묘지 참배도 연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남대학교를 방문한 6일 광주항쟁 당시 미국 정부 책임을 묻는 학생단체와 경비 업무에 투입된 경찰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부 등 학생 1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0여 분간 대학본부 총장실 앞에서 해리스 대사 방문에 반대하고 5·18 당시 미국 정부 책임을 묻으며 농성했다.

총장실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에 들어간 학생들을 경찰이 해리스 대사 일행의 통로를 확보하고자 끌어내면서 밀고 당기는 승강기가 벌어졌다.

학생들은 해리스 대사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2시 30분부터 본부 중앙현관에서 손뼉맞고 별침막을 들고 "광주학살 사

과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3시께 해리스 대사 일행이 다른 출입문을 이용해 총장실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해리스 대사는 정병석 총장을 예방한 뒤 전남대 교내에서 대학생 모임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바꿔 광주항쟁을 방문했다.

광주진보연합은 5·18묘지에서 해리스 대사 참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5·18묘지 참배 일정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며 "광주에 도착할 때까지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공무원에 선전문 제작 요구

###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

광주지방검찰청은 "공무원에게 선거 선전문 제작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반모 광주시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반 시의원의 요구로 자료

를 작성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김모(7급)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반 시의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김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자료와 모바일 연회장, 선거공보물, 의정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미투 덕분에...초등생 성추행한 한의사 10년 만에 처벌



○··법원이 10여년 전 초등학생 환자를 성추행한 70대 한의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74)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환자 B(당시

11세·여)씨를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것. ○··B씨는 최근 '미투운동'의 영향을 받아 가족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10여년 만에 털어냈는데, 재판부는 "의료인인 A씨가 어린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가 고령인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